

# “사회개혁 좌·우 함께 고민해야”

김우창 고대 명예교수 계간 '당대비평' 서 주장

### '광장의 열정' 만으로 변화 가져올수 없어 경직된 이념갈등 접고 열린 사고 펼쳐야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 인해 촉발된 광장의 열기를 통해 1차 심판을 받았고 정치권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좌우의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과연 대중의 열정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걸까.

“우리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김우창(67)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말은 현실을 날여서는 에너지의 분출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원리는 아니다”며 대중의 열정이 지향하는 분배의 확대 등 ‘사회적 권리’는 좌·우 모두가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가능하

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간지 ‘당대비평’ 여름호에 실린 ‘한국의 민주주의, 탄핵 너머로 가는 길’이라는 기고문에서 “이념 갈등을 통해, 우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규정한. 그는 ‘선거의 결과는 한 지도자나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보다도 역사의 긴 과정을 드러내 보여 준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해 가는 우리사회의 흐름에서 나왔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역사학자 T.H. 마셜의 말을 인용,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권의 획득 역시 시작



해,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권리’를 가져, 소득과 사회적 권리의 결이인 ‘사회적 권리’로 진행된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법률적 제도의 개혁으로 가능한 민권 또는 정치적 권리와 달리 사회적 권리는 소득배분의 구조 내지는 계급구조의 개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권리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정치개혁이며 민주주의의 의미로 크게 수정하거나 부정하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권리는 세계의 모든 민주정부가 정책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커다란 기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수사적인 대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권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내용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여러 경우나 경직된 이념의 체계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과 소망을 단순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최근의 정치권 및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 양상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광범해 있는 것이 반정치적 풍조”라며,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성이 사교를 열어 놓음으로써 자기비판적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끊임없는 새로운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자기성찰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며 특유의 ‘심미적 이상’의 논지를 폈다.

임주영기자 eye@munhwa.co.kr



14일 서울의 대학원에서 TV로 중계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들.

## 다국어 음악용어 대사전 출간

양일용교수 국내 처음으로

■ 국내 처음으로 다국어 음악용어 대사전(대림출판사)이 발간됐다. 음악 용어는 국제적으로 1966년에 제7차 국제음악학회의 회의에서 18~20개국의 음

악용어를 정리해 ‘다국어 음악용어사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음악 용어를 정리 또는 번역하는 작업이 없어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문가 사이에도 혼란이 있었다.

이 책을 편찬한 양일용 교수(66·정로회 최후신학·음악학박사)는 연세대 성악과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음악대와 프랑

스 파린 예클노르크 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과 국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양 교수는 “지난 10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간된 각종 음악학자서적을 참조해 수 많은 음악부호들을 거의 빠짐없이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간된 음악용어 사전들 중 가장 규모가 방대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사전에는 기본 용어는 물론, 숲어, 파생어, 합성어 등 4만여 개의 용어를

수록했다. 또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음악용어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특히 러시아 음악용어를 별도의 단원으로 소개했다.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리어, 그리스어는 물론 동양어로 된 약칭까지 알파벳으로 번안했고, 현대음악 부호들도 알기 등 분야별로 정리해 연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임주영기자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④ 青馬의 꿈, 그리고 시민사회문화

## 사이버 공론장이 큰역할 정치지형 단숨에 바꿨다

산에 산에 산에 산에 사는 메아리/언제나 찾아서 외쳐 부르며/반기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별거뿔은 붉은 산엔 살 수 없어  
김교수 산에 산에 산에 나무를 심자/산에 산에 산에다 웃을 일하자/메아리가 살게서 나무를 심자.

▶ 한때 아이들이 즐겨 불렀던 동요 ‘메아리’. 나무가 우거진 산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새도 많다. 이렇듯 생명으로 충만한 산에 메아리가 살고, 청풍(靑風)이인다.

정마(靑馬) 유자원이 가사를 지은 ‘메아리’는 한국 전쟁 이후 우리사회의 괴폐를 개탄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언하고 질박하게 노래한다. 전쟁으로 촉발 구멍이 가도 아비만 반도 전역의 ‘별거뿔은 붉은 산’은 죽어버린 우리사회의 상징이었다. 무엇이 죽었든가, 자유시민이 죽고, 시민사회가 죽었다.

자유여론의 나무를 울창한 숲으로 자라  
시대흐름 거스른 탄핵 큰울림으로 심판

이 칼날은 ‘별거뿔은 붉은 산’에 그나마 울타리는 푸른 싹들을 거듭 거듭 베어왔다.

나무는 자유로운 시민이고, 나무의 나무가 만드는 울림 있는 공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자유여론의 공론장들이다. 계속 따라 흐르는 개울과 웅덩이들은 자유로운 시장이고, 새들의 지저귀는 자유로운 예술촌이다. 낙엽과 풀과 이끼로 거둔 땅은 상상하는 경제와 민생의 풍요로운 터다.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죽였다. 이를 두고 시인은 ‘메아리가 죽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마의 소꿉대로 이제 다시 우리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있다. 메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되살아나고 있다. 기암의 공론장에 사이버 공론장이 더해졌다. 시민사회문화는 자생적, 자율적이며 상상적, 추체적이다.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시민’(civil)이란 수식어는 문명적, 자율적이라는 뜻을 갖고, 군사적, 폭력적이라는 말과 대립된다. 군사적, 폭력적 문화는 1987년 민주화 투쟁 이전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감각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일체였다. 1987년은 문명적, 자율적 시민사회의 출발점이었다.

그것은 출발점의 뿐이었다. 냉전의식과 권위주의의 잔존했고, 지역감정은 격화하기도

했다. 실망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는 결국 맑호르듯 흘렀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87년 이래 한국 사회가 탈권위주의, 민주주의 심화의 방향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증언했다. 지난 4·15 총선은 그것을 또 한번 극적으로 증명했다. 이유 없는 무림이 있었지만, 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크게 보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보려했던 시도였다.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흔들고 놓은 ‘탄핵역풍’이란 87년 이래 어느덧 제법 울창한 숲으로 성장한 한국 시민사회가 시대의 역류에 용하여 용출해낸 메아리 현상이 대두 아니었다. 메아리는 총도 칼도 없이, 돈도 위세도 없이, 은은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민심을 흔들며 감동시킨다. 야당의 의석수만큼이나 무소불위로 보였던 탄핵의 위풍은, 시민사회 날도 북도 마

의 울창한 숲으로 울려 들어나기 시작했다. 자유여론의 나무를 울창한 숲으로 자라 시대흐름 거스른 탄핵 큰울림으로 심판

다를 흔들며 깨우면서 탄핵반대의 시민사회 공론으로, 큰 울림으로 되풀이 왔다. 이 메아리는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뒤집어 놓았을 뿐 아니라, 4·15년의 긴 공백을 단숨에 뛰어 넘어, 진보정당을 원내로 들여보냈다.

이 시민적 메아리 현상은 일찍이 에펠타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살펴본 공명관 광망자(impartial spectator)와 작동원리가 유사하다. 그는 성숙한 시민사회 도덕감정의 적정성(propriety)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sympathy), 즉 사회적 울림에 의해 작동된다고 하였다. 이번 총선의 표상이 그와 다르지 않았다. 탄핵역풍은 공명관 광망자의 공명관을 휘둘러 탄핵역풍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정치 세력의 미래는 시민사회의 푸른 울림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귀 기울일만한 공자가 말한 이순(耳順)의 경지가 달다. 아직은 부족한 절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도 시민사회의 성장이 눈높이를 맞추어 서로 가만(加護)하고 상응한다면, 정마의 꿈이 현실로 완성되는 날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

김상준 (경희대 NGO대학원교수·사회학)

